



주간통일정세 2010-22(2010.05.24~05.3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5/27, 중방)
-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궐기모임, 5/25~27 양강도와 삼지연, 대흥단, 백암군에서 진행(5/28, 중방)
 - 김히택(양강도 黨 책임비서), 장용석(혜산시 黨 책임비서) 등 참가

나. 경제

■ 기타 (대내 경제)

- 제21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2월, 캐나다) 기념우표 및 탁구경기 장면 새 우표(묵음전지 1종) 각각 발행(5/24, 중통)
- 사회과학원, 圖書 '고려한자시문학연구'와 '조선민속놀이편람' 출판(5/25, 중통)
- 최근 평양 대동강맥주공장(평양시에 150여개)의 발효탱크 등 설비 증설(현대화공사)로 생산능력 2배 성장, 맛과 특이한 향으로 근로자들의 청량음료로 호평(5/27, 중통)

다. 사회·문화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평양학생소년공전에서 평양인형극단의 인형극 <요술에 걸린 꿈> 등 공연진행 中(5/24, 중통)
- 北 「보천보혜불상」 체육경기대회 최상급 축구연맹전(5/10~),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中(5/26, 중통)
- 경희극 '산울림', 5/25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공연 진행(5/27, 중통)
- 北 여자 축구팀, 5/27 '2010년 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대회'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에 1:0으로 승리(5/28,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기타 (대외 일반)

- 北 청년동맹 대표단, 이란 민족청년조직 대표단과 5/23 테헤란에서 회담(5/24, 중통)
- 김영남, 5/24 요르단 독립 64돌 즈음 अब둘라흐 2세 국왕에게 축전 (5/24, 중통)
- 김영남, 5/21 ‘아프리카의 날’ 즈음 아프리카동맹 위원장에게 축전 (5/24, 중통)
- 김영남, 5/24 인도 여객기 사고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 (5/24, 중통)
- 독일 사회민주당출신 연방의회 의원(요한네스 플루그) 일행, 5/24 평양 도착(5/24, 중통)
- 김영남, 5/27 에티오피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5/27, 중통)
- 北 외무성 대표단(김형준 부상), 5/27 아랍국가 방문차 평양 출발 (5/27,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기타 (6자회담: 북핵)

- 北 외무성 대변인, 5/24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NPT 평가회의(미국, 뉴욕)시 북 핵보유국 불인정, 핵포기 등 대북 여론 관련 “그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5/24, 중통)

3. 대남정세

[천안함 관련 북한 동향]

- 탈북자단체들 ‘천안함 사건, 김정일이 지령한 것’(5/24, 연합뉴스)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 등 25개 탈북자 단체는 24일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의 최종 결재와 지령 아래 치밀하게 계획되고 집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밝힘.
 -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추후도 의심할 것 없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 당국의 군사적 도발로 빚어진 참상”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한 “북한에 무분별한 퍼주기룰 하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단이 만들어 진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습 흉악범에겐 돈이 아



나라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 北, ‘심리전 방송 재개시 조준 격파사격’(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오후 1시 11분 발표된 북한의 이런 입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태영 국방, 유명환 외교, 현인택 통일 3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담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남북합의에 따라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임.
-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또 “전선중부의 괴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현병초소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가 출현했으며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해 확성기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북남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중대사건”이라고 주장
- 이어 “330현병초소 건물벽에 새겨 놓은 대북 심리전 구호를 즉각 제거하고 범죄행위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군인들은 이런 도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조준 격파사격으로 심리전 구호와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들을 통째로 날려보낼 데 대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부산-나진 北 화물선, 3년 만에 운항중단(5/24,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2007년부터 부산항과 북한 나진항을 오가던 북한 국적 정기화물선 ‘단결봉호’의 운항이 3년 만에 중단됨.
- 단결봉호는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됐을 때도 정상 운항해 왔음. 2008년 11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와 지난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단결봉호는 정상 운항함.

● 北국방위, 李대통령 담화 비난(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난
- 국방위 대변인은 이 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



조국'이 드러날까봐 쓰고 있는 권모술수"라면서 "역적 패당은 우리를 반대해 서투른 '날조국', '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또 "뒤가 썩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

● 김정일, 전군 전투태세 돌입 명령(5/25, NK지식인연대)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민군과 전 민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짐.
- NK지식인연대는 25일 북한 내 자체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던 20일 오후 7시께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전함.
- 북한의 '3방송'은 각 가정의 스피커로 전달되는 '유선 라디오 방송망'인데, 북한 당국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주민들한테만 전달할 때 이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오 부위원장은 또 "미국과 남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공화국(북한)과 연계시키며 보복하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남한이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고 꾸며낸 모략"이라고 주장, 이어 "공화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남조선이 공격해 오면 이번 기회에 조국해방전쟁(6.25전쟁) 때 다하지 못한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명령"이라고 강조

● 北통신,李大統領 대국민 담화 또 비난(5/2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방·통일·외교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응징과 보복,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위협
- 또한 통신은 '반역패당의 무모한 보복론에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무고한 동족을 걸고 감행되는 '보복론'으로 하여 산생되고(빛어지고) 있는 현사태를 엄중한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힘.
- 논평은 또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함선침몰 사건을 북남 대결의 최대 기회로 여기는 이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역적 패당은 강성대국의 앞날이 멀지 않은 우리의 대진군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은 전날 오전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뒤 8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국방위원회 대변인과 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처음 비난 발언을 쏟아냈고, 약 29시간이 경과한 25일 오후 다시 이 논평을 내놓음.

- **北 남측, 영해침범 계속하면 군사적 조치실행(5/2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25일 “(남측의) 해상침범 행위가 계속되면 이미 천명한 대로 우리의 해상수역을 고수하기 위해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만 해도 수십 척의 해군 함정들을 우리측 영해에 침범시켜 함부로 돌아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 같이 주장
 - 북측 단장은 또 “이는 조선 서해 해상에서 또 하나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북남 관계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면서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강변
 -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의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했고, 이어 같은 해 9월 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음.

- **北보안부, 특별기동대 창설(5/2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발표한 당일 북한은 반체제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 산하에 특별기동대를 창설했다고 전함.
 - 매체는 ‘신의주 소식통’을 인용, “24일자로 북한 전역에서 도(道) 인민보안부 산하에 300명 규모의 특별기동대를 신설했다”며 “특별기동대는 국경지역에서의 이동전화 사용, 외국 녹화물 시청, 뼈라(대북 전단) 수집 행위, 당국에 대한 비방행위를 반국가 범죄 차원에서 다루려고 한다”고 밝힘.
 - 또한 “기동대 신설은 과거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가 담당했던 반체제 및 반국가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하면서 “최근 ‘보안성(省)’에서 개칭한 ‘보안부(部)’가 보위부의 보안기능까지 흡수해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



◆ 北 조평통 담화발표문 ◆

- 南 당국과 “모든 관계 단절” 등 8개항의 1단계 실행조치 ‘담화’(5.25)
- ① 南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 ② 現정부 임기기간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 중단.
 - ③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중지.
 - ④ 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
 - 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
 - ⑥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北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
 - ⑦ 南 선박, 항공기들의 북측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 금지.
 - ⑧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

- 北, 南대북조치에 ‘남북관계 단절’ 대응(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남한의 국방·외교·통일장관의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한다”고 선포,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우리측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금지한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언급
 - 그는 이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면서 “앞장에 나서서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무모한 도발로 공식 도전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단호한 징벌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제부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 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며 이와 같은 8개 항을 1단계 조치라고 밝힘.
- 北, 南도발에 섬멸전으로 대답(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군사논평원’은 25일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조사결과 발표는 ‘날조설’이라며 “만약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에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떤 사소한 도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정의의 섬멸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힘.
 - 군사 논평원은 이날 ‘북 어뢰공격설의 진상을 논한다’는 장문의 글에서 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 등을 내세워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기보다 ‘1번’이라는 글씨



등 남쪽에서 제기된 일부 의문점을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민·군 합동 조사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을 겨냥해 “이 나라들은 괴뢰들이 연출한 모략극의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살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모여든 쉬파리떼”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논평원은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풍’을 노린 위기탈출용”이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함선 침몰사고의 원인을 우리와 연계시키면서 동족압살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역적패당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반격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판문점-해운통신선 단절 통보(5/26, 연합뉴스)

-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밝힌 행동조치에 따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 당국 간 통신 차단을 통보해 왔다고 밝힘.
- 북측은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의 사업중단과 통신연계를 차단한다고 알려왔으며 해사 당국 간 통신망에 대해서도 우리 해운 당국 앞으로 통신연계 차단을 통보

● 北, 남북경협사무소 인원 추방도 통보(5/26, 연합뉴스)

- 북측이 26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남북교류협력협 의사사무소) 인원에 대한 추방을 우리 측에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11시 5분경 경협 사무소에 찾아와 이날 낮 12시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함.
-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가동됐으며 현재 통일부 직원 8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경협 관련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해왔고 남북 당국 간 접촉 장소로 쓰였음.

● 北, 심리전 재개시 ‘개성공단 폐쇄’ 위협(5/2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확성기 설치하는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자,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 격파사격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주장
- 북측 대표단장은 또 “만약 남측이 뼈라(전단)살포행위를 의연히 계속하고 심리전 방송까지 재개하면 즉시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우리 군대의 강경대응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中과 국경에 박격포·방사포 배치(5/26,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북·중 국경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에 박격포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이 일대에 방사포 여단을 전개시킨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소식통은 이날 “올해 2월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북·중 국경 전역 국경경비대의 각 중대까지 82mm 박격포를 운용하는 화력지원 소대가 새로 편성돼 실전 배치가 끝났다”고 밝힘.
- 소식통은 “82mm 박격포는 휴대가 가능한 60mm와 달리 차량으로 견인해 이동한다”며 “박격포 소대마다 최소 4문이 배치됐다는 것은 국경경비대가 기본적 보병부대의 화력을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
- 북한은 내부적으로 “중국 쪽에서 남조선 특공대가 공격해올 수 있다”면서 화력 증강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 軍 총참모부 중대 통고문** ◆

北, 우리 대통령 3部 장관의 「對北 제재조치」 발표(5.24) 관련 7개항의 ‘중대 통고문’(5.27)

- ① 남북협력교류와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 철회
- ② 南 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책동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응
- ③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쌍방향의 완전히 무효화
- ④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 침범시 즉시 물리적 타격
- ⑤ 北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南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를 전면 불허
- ⑥ 南 당국자 북한 출입 엄금
- ⑦ 검열단 차단행동이 계속되는 한 ‘날조곡’, ‘모락곡’ 정체 끝까지 규명.

● **北총참모부, ‘남북교류 군사적 보장 철회’(5/2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남 협력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중대통고문’을 통해 7개항의 ‘중대조치’를 밝히면서 동·서해 군 통신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육로 통행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이 같이 말함.
- 총참모부는 또 이번 통고문이 ‘혁명무력의 1차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으며, “(남조선) 괴뢰 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대해 전반적인 전선에서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조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향의 완전히 무효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 해상 초단파 무선 대화기 사용을 일체 중단하고 긴급 정황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선로도 즉시 단절할 것”이라고 말함.
- 통고문은 “조선 서해의 우리측 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 행위에는 즉



시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뒤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역적 패당의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도 전면 불허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괴뢰 당국자들을 포함한 역적패당들의 우리 공화국 경내 출입을 철저히 엄금할 것”이라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에 대한 차단 행동이 계속되는 한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강변

● 北, 재외공관 통해 천안함 결백 주장(5/2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일 남한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자국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재외공관의 무관 등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함.

● 北국방위 ‘130t 연어급 잠수정 보유 안 해’(5/28,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 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박 국장은 “130t 짜리 잠수정이 1.7t짜리 중어력을 싣고 해군기지에서 떠나서 공해를 돌아서 ㄷ자형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 다시 돌아간다는게 군사상식으로 이해가 가느냐”며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
- 박 국장은 검열단 파견 입장에 대해 “우리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 지역에 파견해서 그들이 내놓는 물증들을 현지에서 직접 검열·확인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남측은 날조된 조사결과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검열단의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외무성, ‘안보리 회부 지지’ 美 비난(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발표하며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천안호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만약 유엔 안보리가 또 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아나 천안호 사건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상정 논의만 해도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우리가 이미 선



포한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하수인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낙인해 남조선 당국을 내세워 군사정전위에서 문제를 논의하지는 주장을 펴는 것 역시 자기모순”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군 측 수석위원을 철수시키고 남조선 장성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때부터 군사정전위는 마비됐다”고 주장

● 北조국전선, ‘南주민들에 보내는 공개편지’ 발표(5/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29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
- 통신에 따르면 조국전선 중앙위는 공개편지에서 “곧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는 지방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여야 사이의 단순한 표싸움이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나,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면서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독재의 표”라며 이 같이 말함.
- 조국전선은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결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니다”며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을 부인하면서 “괴뢰 보수패당이 꾸며낸 전대미문의 모략광대극”이라고 주장
-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도 27일 성명을 발표,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다시 주장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떨쳐 일어나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전면 파탄시키고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 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

● 北평양서10만 군중대회… ‘천안함 무관’ 재차주장(5/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어 우리 측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다시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남한 정부를 거칠게 비난
-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주민 10만여 명이 평양시내 김일성 광장에 모여 ‘미제와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모략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
- 북한 노동당 평양시당의 최영림 책임비서는 보고에서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킨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를 떠벌이고 있다”며 “남조선과 그에 결탁한 미·일의 반공화국 대결모략 책동으로 당장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또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과 관련, “괴뢰패당이 외세와 공조해 응징과 보복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한계 없는 보복타격,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선군사상으로 무장해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고 원수들이 덤벼들면 즉시 섬멸전을 벌일 전투동원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변
- 이 대회 주석단에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당 비서, 김기남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모습을 보임.

[천안함 관련 남한 동향]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



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현통일 '남북해운합의서 유지... 운항불허'(5/24, 연합뉴스)**

- 현인택 통일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한 외교·통일·국방 등 3개 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쪽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 운항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있지만 정부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힘.
- 현 장관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털어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함.
- 그는 “개성공단은 현재 상태로 생산여건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까지럼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험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 또 방북승인 불허와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조치에 대해 “영유아 지원 등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인도적 목적의 북측 주민 접촉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시사

● 국방부 ‘오늘 오후 심리전방송 재개’(5/24, 연합뉴스)

- 국방부는 24일 오후부터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며 해상항로를 폐쇄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대북 전단살포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음.
-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에 관한 보충설명을 통해 “오늘 오후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오늘이라도 대북 전단 살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함.
- 군 당국은 2004년 6월 15일 중단한 ‘자유의 소리’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함. 이 방송은 FM방송으로, 전파변환 장치를 거쳐 앞으로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지역에서 재설치 되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해짐, 군은 이달 중으로 MDL 지역에 확성기 설치작업에 착수
- 장 실장은 “오늘 남북항로를 폐쇄했으며 북한에 오전에 전통문을 보내 폐쇄 사실을 주지했다”며 “이미 영해에 들어온 3척의 북한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해 통과를 허용했다”고 설명

● 김국방 ‘北, 심리전 공격하면 즉각 대응’(5/24, 연합뉴스)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나 전광판에 북한이 공격할 경우 대응 방안과 관련, “북한 측이 심리전 수행을 공격해 온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또 그는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심리전 방송 시설을 북한이 격파한다면 명백한 군사도발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함.
- 김 장관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근로자들이 인질로 잡힐 가능성과 관련,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 그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질 사태가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기업별 할당(5/25, 연합뉴스)

- 통일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체류인원을 사실상 할당한 것으로 전해짐.
- 2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지원 등을 맡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지원단)은 전날 입주기업들에 공문



을 보내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원 복귀할 것을 주문

- 다만, 개성공단에 체류하지 않고 당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경우는 방문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입주기업별로 할당된 개성공단 체류상한이 유지되면 직원이 교대로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

● **해군-해경, ‘남북해상항로 폐쇄’ 공조(5/25, 연합뉴스)**

- 해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남북해상항로 폐쇄’ 결정에 따라 24일 오후 해경과 회의를 갖고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해군작전사령관과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해군과 해경은 북한선박의 위협과 도발 양상을 분석하고 대응절차 등을 논의했음.

● **南정부, ‘北=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확정(5/25, 연합뉴스)**

-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함.
-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함. 또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임.
-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 만임.

● **軍, ‘문무대왕함’ 北선박 차단작전 투입(5/25, 연합뉴스)**

- 군당국은 제주해협에 진입하는 북한 상선 차단을 위해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KDX-II.4천500t급)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
-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제주해협에 진입하는 북한 상선을 차단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군의 문무대왕함을 투입했다”면서 “현재 제주 동방에서 북한 선박 진입 여부를 감시 중”이라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제주도 쪽으로 향해하는 북한 선박이 식별될 경우 해상초계기(P-3C)와 링스 대잠 헬기를 추가로 투입해 차단할 것”이라며 “문무대왕함과 P-3C를 운용하는 포항의 해군 6전단이 수시로 통신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함.

● **軍, ‘北추가도발’ 예의주시…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5/27, 연합뉴스)**

- 군 당국은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북한군의 군사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전력 이동 등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대북 감시체계는 강화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유형별 추가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 군은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유형과 관련,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붙잡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우리 함정에 포사격을 가하는 것 등을 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사 분계선(MDL) 지역의 최전방 소초에서 국지적인 충격전도 예상 도발 시나리오로 상정된 것으로 전해짐.

- 국방위는 성명에서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 광신자들의 도발로 낙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 김태영 국방장관은 26일 국방·통일·외교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열린 천안함 설명회에서 “북한이 전방에서 화성기 등에 조준사격을 가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교전규칙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을 사태 악화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

● **軍, 특전사서 ‘北우발행동’ 대응 전술토의(5/29, 연합뉴스)**

- 군 당국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에 반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전술을 토의
- 이상의 합동참모회의 의장 주관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에서 열린 전술토의에는 최용립 특전사령관과 배명현 항공작전사령관, 합참의 주요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함.
- 군 관계자는 “대북 군사대비 태세 강화를 비롯한 북한의 유형별 군사 도발에 대한 작전개념의 방향 설정을 토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반도 긴장에 韓·美·日도 원인제공” <中관영언론>(5/28)

-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도 상당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8일 사실을 통해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이 신문은 26일자 사실에서는 “북한의 반발은 설득력이 없고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시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어 이들 사이에 논조가 상당히 바뀐 배경이 주목됨.
- 환구시보는 이날 중문판과 영문판에 공동으로 실린 사실에서 한반도 상황이 이처럼 위기에 처한 것은 북한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 ‘북한을 대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음. 신문은 “현재의 위기 상황은 결코 북한 혼자서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반도 정세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이 한걸음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음. 그러면서 “규모와 역량이 적은 북한으로서는 물러설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량이 강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좀 더 양보하는 것이 국면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한·미·일이 압박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을 접고 북한의 정치체제를 존중해 국제사회의 관행을 준수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주변 국가들은 북한을 조소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국제사회의 이단으로 보지 말고 북한에 대한 불가침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북한이 필요한 안보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신문은 북한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지만 논조는 크게 강하지 않았음. 신문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한·미·일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친 채 핵무기가 진정한 안보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촉구했음. 신문은 “한국과 미국 등은 ‘천안함 사건’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북한을 위협하고 이에 대해 북한도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음.
- 이 신문은 이들 전에는 관영 언론으로선 처음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면 시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이처럼 논조가 이틀 만에 갑자기 바뀐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남북 사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北, 전면전 유발 도발 피할 것” <美전문가> (5/27)

- 북한이 천안함 사태 후 한국과 전면 대결을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도발은 피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음.
- 데이비드 강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장은 26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라이트 에릭 이즐리 방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올린 글에서 북한의 앞으로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비무장지대와 남북이 분쟁 중인 해상에서 좀 더 제한된 규모의 충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도발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음.
- 이들은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하고 소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모든 당사자가 전쟁은 그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에 대한 억지력이 아주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 지도자가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의 정통성을 견고하게 하려고 천안함 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면서 최근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대남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 내부정치의 산물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이런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강 소장 등은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중간노선’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음. 중국의 전략가들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 결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고,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때는 북한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임. 이에 따라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가 모두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저지하는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 소장 등은 분석했음.

● “北, 재외공관 통해 ‘천안함 결백’ 주장” (5/27)

- 북한이 지난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자국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들은 관련국들의 반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재외공관의 무관



등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북한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도를 비롯한 주요 비동맹 국가들까지도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북한의 설명을 들은 각국 정부가 한국의 재외공관에 이런 북한의 동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해외공관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외교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한반도 20년來 가장 심각한 위기”<WP>(5/26)

-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맞선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 내용을 전하면서 “무력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20년 이상 만에 한반도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이례적으로 1면 톱기사로 ‘북, 한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이라는 한반도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 “자멸적(self-destructive)인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조치들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없다”면서 “부유한 한국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북한의 붕괴하는 경제에 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WP는 스스로 불을 붙이는 광기와 같은 것으로 외부에는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유지용 방안이 여전히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외부와의 갈등을 내부 결속 강화에 사용하는 북한의 오랜 행동 패턴이 다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 WP는 “북한 선전기관은 외부세계에 대한 김정일의 반항을 (내부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유발하고, 점점 더 암울한 상황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브라이언 마이애스 동서대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은 강한 군사력에 대한 자긍심 외에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다른 소재가 없다”며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는 이런 북한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외부와의 갈등이 김정일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작되고, 만성적인 빈곤에 대한 변명 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신문은 천안함 사건 공동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결과와 관련한 별도의 기사에서 “이란과 북한 및 다른 핵심 현안들에 대해 어떤 중요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미·중 양국이 일부 합의문에 서명하기도 했지만, “더 큰 이슈들에 있어서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중국



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의 보고서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 **“국제사회, 구체적 대북제재 쉽지 않아” <英신문>(5/28)**

-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가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7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한은 또 다시 분노를 피해갈 것’이라는 도쿄 발 분석기사에서 “증거를 발표한 지 6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내려진 제재 조치들은 인상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이 신문은 “한국의 교역중단 조치는 파괴력이 별로 없고 대북 심리전도 위협적이지 않다”면서 “군사적인 대응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북한은 이미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찾아내기도 힘들다”고 분석했음. 더 타임스는 이어 “북한이 도발해서 위기를 초래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세계가 분노로 씩씩대다가 북한을 벌 줄 때에는 반대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고 말했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 놓아 교역 및 원조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의 현금 송금을 제한하는 방법도 남아 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떤 성명(statement)을 들고 나오고 미국과 영국은 단호함과 중요성에 대해 크게 떠들겠지만 이는 북한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무기력함을 감추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비꼬았음.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논평 기사에서 “남북한 양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지만 양측 모두 실제 전면전을 원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이 신문은 그러나 “잘못된 계산이나 오해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타임, 한반도 국지적 충돌 시나리오 분석>(5/27)**

-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소규모 국지전이 발발할 개연성이 있다며 3개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했음. 타임은 26일 인터넷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기’란 기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발발 가능한 국지전 시나리오를 소개했음.
- 이 예상에 따르면 첫 번째 가능성은 서해상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재충돌 가능성. 타임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서해상에서는 이미 3차례 남·북한 간 충돌이 발생한 위험한 해역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해상분계선 획정을 주장하는 만큼 유사한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서 남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에 강력 대응하고 나설 경우 국지적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됐음. 북한은 특히 “확성기 설치하는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자,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확성기가 설치되면 조준 격파사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경우 남한도 정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확성기가 남북한 충돌의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게 타임의 분석
- 마지막으로 DMZ 주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지적됐음. 특히 한국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침범시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타임은 국지전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 소통수단이 모두 단절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 전할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따라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한편 타임은 ‘왜 한국은 부정 속에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다른 기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억상실로 인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푸가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둔감해진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천안함 사건 증거 강력”(5/29)

- 미국은 28일(현지시각) 천안함 조사에서 나온 북한 개입증거가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대응 동참을 촉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기회를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조사결과 후 나온) 증거는 강력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일치되고 입증된 방식으로 함께 모여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평양에서 내외신 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거듭 반박한 이후 나온 것임.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조사의 증거들에 기초해 결론을 내려야 한



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 노력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국이 북한의 행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지역과 세계에 주는 위협을 추가로 제한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동되는 중에도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을 해왔다는 유엔 보고서 발표와 관련, “완전한 폭로는 아니다”면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버마(미얀마) 등 보고서에 거론된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 (무기 등의) 수출에 대해 우려를 가져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위조 물질, 불법 물질 및 위험스러운 하드웨어나 물질의 수출국이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인식해 왔다”면서 “미사일과 핵기술 등의 수출은 북한의 현금 확보수단(cash crop)”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외무성, ‘안보리 회부 지지’ 美 비난(5/28)

- 북한 외무성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을 정면으로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담화를 발표하고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만약 유엔 안보리가 또 다시 미국의 거짓말에 놀아나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상정 논의만 해도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우리가 이미 선포한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하수인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낙인해 남조선 당국을 내세워 군사정전위에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 역시 자기모순”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군 측 수석위원을 철수시키고 남조선 장성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때부터 군사정전위는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 한국을 방문해 안보리 회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 美 “北,이란 고립심화 다양한 수단 추구”(5/28)

-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에 핵포기 여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고립을 심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출범 후 16개월 만에 발표한 새로운 ‘국



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 의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 다양한 수단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 목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선언인 이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만큼 미국인들에게 위협적인 것은 없다면서 “이들 두 국가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란이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한다면, 그들은 국제 사회와 좀 더 큰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적 규범 밖에 있는 국가들은 (상응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고립될 것이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에 대가를 가져다주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이 될 이번 보고서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와 군사력 의존, ‘카우보이식 외교’에서 탈피해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공식화했다.
- 또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면서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동맹은 아시아 안보의 기반이자 아태지역 번영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은 지역과 글로벌 문제들을 푸는데 점점 더 중요한 리더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 원칙과 관련, “미국은 우리 국가와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면서도 군사적 수단은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뒤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부시 행정부 당시의 군사적 일방주의에서의 사실상 탈피를 선언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인들 혼자서 어깨 위에 짐들이 놓일 수는 없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군대는 항상 우리 안보의 기초가 될 것이지만,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새롭고 심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며, 국제적 기준들과 기구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공개된 5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사용했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알-카에다를 미국의 적으로 명시했지만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우호의 손길을 계속했다. 또 미국 본토에서 급진화된 일부 과격분자들에 의한 자생적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국가안보 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처음 명시했으며, 미



국의 경제 발전을 국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강조하기도 했음.

-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과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인도 등과의 파트너십 확장 내용도 담았음. 로즈 부보좌관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옵션들을 주는 것”이라면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겠지만, 무력을 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갈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美상원, ‘BDA식 금융제재’ 입법 추진(5/26)

-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해 취해졌던 미국 행정부의 금융제재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추진됨.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미 상원의원은 2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년전 미 행정부는 독자적 차원에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함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준 바 있다”며 “나는 의회에서 그와 유사한 금융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브라운백 의원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BDA와 같은 방식의 제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입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BDA 금융제재’는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한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돈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된 조치로 평가돼 왔음. 브라운백 의원은 또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 치명적인 기습공격을 가했다”며 “북한은 반드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하며,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음.
- 그는 이와 함께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지난 2008년 해제했던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부활해야 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의회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이런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또 그는 “유엔 차원에서는 다자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제재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브라운백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북한은 너무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나라로, 주민들의 눈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브라운백 의원은 천안함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 “중국은 북한에 있어 핵심 동맹국이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강력한 톤으로 북한을 비난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단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북한과 지도자들 책임 물을 것”(5/2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며 “(이번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행위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도발행위와 이웃나라에 대한 호전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취한 대응조치들은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들로서 미국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주도한 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으며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과 중국의 리더들과 협의했으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조치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안보리 회부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한 것과 그 후 대응책을 마련한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의 접근방향으로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긴장 고조를 예방하고 더 큰 갈등으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는 옳은 접근”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언급, “중국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우려사항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중국과 협의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천안함 침몰이라는 즉각적 위기에 대해 아주 강하고 계산된 대응책이 필요하며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실제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후속대응 조치와 관련, “한·미 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히 한 치의 불일치도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미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양자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유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6자회담 문제와 관련, “6자회담 복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회담에 돌아와서 진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태가 북한 비핵화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유엔 안보리 회부문제에 대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음.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은 외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인내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음.

● 美하원, 대북규탄 결의안 의결(5/26)

-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음.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음. 이 결의안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주도로 발의된 이 결의안에는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일레나 로스-레티넨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애커먼(민주) 외교위 부위원장, 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음. 버먼 외교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고의적인 이런 공격은 한국전 정전협정의 분명한 위배”라면서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및 새로운 다자·양자적 조치 검토를 통해 북한의 호전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 하원 정보위원회 관련 소위는 26일 오후 비공개 청문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정보당국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임. 한편 짐 웹(민주·버지니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국, 태국, 미얀마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지금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해야 할 시기”라면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리더로부터 기대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음.



● 美 “‘남북관계 단절’ 北이익에 부합 안 돼”(5/26)

- 미국 국무부는 25일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에 대해 “한국과 추가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상상해 볼 수 없다”고 비판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조치는) 이상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지만, 북한은 심지어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실패한 경제를 가진 국가”라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주민을 돌보고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음. 그는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대응조치와 관련,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국제적 대응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음.
-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 상황과 관련해 “솔직하고 자세한 논의를 가졌다”면서 “계속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들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북한 지도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음. 그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조치와 관련,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서 추가 금융제재 등을 거듭 시사했음.
-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과거에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으며, 북한 정권에 압력을 넣는 방법들을 찾았다”면서 “이런 방안들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그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로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에 근거해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며, 특정한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음.

● 美, 대북제재 시스템 정비·강화 추진(5/25)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미국의 현재 대북제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북제재 시스템 조절·강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음. 이 소식통은 “현재 국무부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미 정부기관들에 대한 북한과 관련된 기존 권한과 정책 재검토 지시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및 이 같은 대북제재 시스템 강화 방안 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정부는 빠르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26일 방한시 금융분야의 대북 추가제재와 함께 제재시스템 정비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국무부 및 재무부 등 관련부처 간에 나뉘어 있는 대북제재 방안의 집행 상황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시스템 검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총괄해 왔던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은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새로운 대북제재 조정관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 한편 백악관이 이날 성명에서 6자회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6자회담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때문으로 전해졌음. 워싱턴 소식통은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6자회담 재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발행위 중단, 국제사회 의무준수, 2005년 공동성명 약속 이행 등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 브라운백 “고립 위한 새 제재 필요”(5/23)

-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미국 상원의원은 22일(미국 시간)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 “미국은 종전의 대북제재를 부활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고립시키고, 동맹인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도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천안함을 겨냥한 북한의 기습공격은 믿을 만하고 안정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점점 더 뻔뻔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傍證)한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운백 의원은 “따라서 한국, 중국, 미국은 북한에서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북한 정권 붕괴 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미 의회 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꼽힘.



다. 중·북 관계

● “中, 대북 경제협력 동결 가능성” <아사히>(5/30)

-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융합 반응 성공’ 발표 후 북한에 대한 지원 물자의 수송을 일시 중단해 경제협력의 동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음. 아사히신문은 중국과 북한의 정보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의 각 무역거점에서 정기적으로 북한에 반출되는 쌀 등 곡물과 화학비료, 의약품, 공작기계 등을 실은 트럭의 통행량이 이달 중순부터 일시중단 또는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합의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국경인 압록강 교량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결을 중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인 지난 12일 북한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는 등 핵개발을 과시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반도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곧바로 핵융합 반응 성공을 발표한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분석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12일 “안전한 새로운 에너지 획득을 위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으나, 핵융합 반응은 고도의 기술과 거액의 비용이 필요해 북한 국내 선전용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강함. 또 한국의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자 핵기술 수준을 과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핵융합 반응 성공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음.
- 아사히신문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생명선이라면서, 천안함 침몰로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원칙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이 축소되면 북한은 한층 어려운 경제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中 “천안함 사건 입장 변화 없다”(5/27)

- 마자오취(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28일 방한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종일관 대결보다는 대화, 긴장보다는 화해가 낫다고 판단하며 진정으로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반도의 긴장 악화를 방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마 대변인은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며 우리는 1차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각 분야의 정보를 연구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해 평가분석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 그는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반도 긴장조성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리더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 마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외부세계의 의혹에 성의 있게 대응하라”고 촉구한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26일자 사설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음. 그는 “사실이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에는 수많은 신문사가 있다”면서 “대변인으로서 각각의 신문들이 보도하는 글에 대해 논평할 생각도 논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이 신문은 전날 사설에서 북한의 반발은 설득력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외부세계의 의혹에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그는 북한이 북중 국경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에 병력을 증강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관련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中, 北中경협 강화 주문(5/27)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 20일 북한 주재 중국기업들을 불러 북중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류 대사의 이런 행보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우리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중국이 거듭 냉정과 절제를 강조하며 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 27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류 대사는 지난 20일 평양에서 북한에 주재하는 14개 중국 투자기구 대표들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대북 무역 및 투자 증진과 양국 간 경협 강화 방안을 논의했음.
- 이 날은 공교롭게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이 북한의 중어뢰에 의해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힌 날임. 우리 정부는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19일 주한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천안함 조사 결과를 사전 브리핑했음.
- 류 대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경제무역은 중조(中朝) 우호협작의 중요한 요소이자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 주재 중국투자기구들이 오랫동안 중조 경제무역 실무협작에 큰 공헌을 해왔다”고 격려했음.



- 그는 이어 “주북 중국대사관은 앞으로 북한 주재 중국기업들의 더 좋은 경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형세 아래서 북한 내 중국투자기업들이 쌍방의 이익을 위해 중조 간 경제무역 교류를 부단히 촉진하는 한편 중조 간 전통 우호 증진의 주춧돌이 돼 줄 것”을 주문했음.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선양(瀋陽) 비행기공업 단둥수출입공사 평양대표부와 지린(吉林)성 평양무역대표처 등 북한에 주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임.
- 주북 중국대사관은 이날 좌담회 개최 사실을 하루 뒤인 지난 21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하기도 했음. 우리 당국도 이날 좌담회 개최 사실을 확인, 류 대사 발언 내용의 진의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묘한 시점에서 북중 경협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류 대사 발언과 관련, 한 대북 소식통은 “공교롭게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일과 겹쳤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당시 합의된 북중 간 경협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러나 또 다른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 관료들을 만나 보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한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가 북중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나 경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음.

● “북한, 중국서 값싼 곡물 수입 늘려”(5/27)

- 북한이 올해 1분기에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콩의 수입은 크게 줄인 대신, 옥수수, 밀가루 등 값싼 곡물의 수입을 지난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동향’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주요 곡물 수입선인 중국으로부터 옥수수, 밀가루 등 콩이나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곡물의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늘린 것으로 집계됐음. 옥수수는 올해 1월 수입총액이 80만6천 달러, 2월 7만9천달러, 3월 119만9천 달러로 1분기 전체로는 208만4천 달러(8천273톤)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3월 수입액 96만3천 달러(4천162톤)에 비해 갑절 이상이 늘어난 것임.
- 밀가루는 1분기 수입총액이 300만4천 달러(9천61톤)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만9천 달러(4천528톤)에 비해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두 배 이상 늘었음. 쌀은 1분기 수입액이 757만6천 달러(1만6천310톤)로 전년 동기 463만4천 달러(1만2천834톤)보다 60%가량 늘었음. 반면, 옥수수나 밀가루에 비해 고가인 콩류는 올해 1분기 수입총액이 113만 달러(1천883톤)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5만1천 달러(3천227톤)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음. 콩은 1월 수입총액이 93만2천 달러, 2월 15만1천 달러, 3월 4만7천 달러로 올해 들어서도 수입량이 계속 감소세를 보였음.
- 올해 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톤당 평균가격은 329달러



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수입단가인 370달러보다 낮았음.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콩의 수입이 줄고 가격이 싼 옥수수과 밀가루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3만7천33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가 늘었지만, 3월 한 달에 들어온 1만9천788톤은 북한 주민의 이틀 치 식량에 지나지 않는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설명했다.

- 한편, 북한은 지난 1분기에 총 4만673톤의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7천498톤보다 대폭 늘어난 것임.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들어 북한은 예년에 비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비료를 수입했는데 이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2008년부터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을 겪고 있으며 올해에도 비료 부족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北, 천안함 의혹에 성의 있게 응해야” <中관영언론>(5/26)

-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외부세계의 의혹에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문제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6일 사설에서 북한은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증거제시와 대응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에는 사실상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반응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의 있는 진실규명을 촉구했음. 중국이 관영 언론을 통해서이지만 천안함 사건이후 북한에 직접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신문은 ‘북한은 외부세계의 의혹에 진지하게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이를 시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사설은 한국이 제시한 천안함 침몰증거와 대응조치가 미국, 일본, 서방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더구나 국제 언론들의 보도와 한국 외교의 노력으로 세계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북한의 대응은 수동적이라는 점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은 또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북한이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무고함을 명백히 증명하거나, 한국의 조치에 진실하고 간절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음.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면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일 등 서방세계의 적의도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사설은 말했다.
- 사설은 이어 남북한은 6.25 전쟁이후 60년간 세계에서 안보가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하나였고 대화와 협상도 그다지 큰 성과를 보지 못했



으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탄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음. 사실은 또 한국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했지만 외부세계가 이를 소화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군사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대응 조치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음.

- 환구시보는 남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이는 한반도사태가 우리에게 분쟁 해결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최대의 계시가 될 것이라고 사실을 결론지었음.

● “北, 中과 국경에 박격포·방사포 배치” <소식통>

- 북한이 북중 국경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에 박격포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이 일대에 방사포 여단을 전개시킨 것으로 전해졌음. 대북 소식통은 26일 “올해 2월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북중 국경 전역 국경경비대의 각 중대까지 82mm 박격포를 운용하는 화력지원 소대가 새로 편성돼 실전 배치가 끝났다”고 밝혔음.
- 국경경비대는 인민무력부 소속이지만 주 임무는 탈북 방지 등 불법 출입경 단속이어서 지금까지 주로 소총 등 가벼운 무장만 해 왔음. 소식통은 “82mm 박격포는 휴대가 가능한 60mm와 달리 차량으로 견인해 이동한다”며 “박격포 소대마다 최소 4문이 배치됐다는 것은 국경경비대가 기본적 보병부대의 화력을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내부적으로 “중국 쪽에서 남조선 특공대가 공격해올 수 있다”면서 화력 증강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도 26일 북한 국경경비대에 박격포와 반탱크 발사관(무반동포), 기관총 등 중화기가 배치됐다고 보도했음.
- 이와 별도로 휴전선 일대와 해안가에 집중 배치되어온 북한식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가 북중 국경에도 배치돼 북한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인 것으로 전해졌음. 소식통은 “얼마 전부터 함경북도 무산, 양강도 갑산 등 북중 국경 인근에 122mm 방사포 여단들이 배치됐다”며 “북한군 내부에서도 중국 쪽에서 깔그러워할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 122mm 방사포는 북한군이 보유한 240mm 방사포보다 구경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로켓 발사관이 4개로 두 배 많아 실질적 화력은 240mm 방사포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 정보당국도 이 같은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소식통은 “북한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박격포나 방사포를 배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4만 명에 달하는 경비대의 전력을 보병부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유사시 전방 증원전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거나 북중 사이의 미묘한 갈등



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음.

라. 일·북 관계

● 日, 300만 엔 이상 대북 송금 보고 의무화(5/28)

- 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을 ‘300만 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대북 송금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을 현행 ‘1천만 엔 이상’에서 ‘300만 엔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음. 또 일본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 엔 이상에서 10만 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각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임. 일본 정부는 하지만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보하기로 했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추가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부터 이미 일본은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며, 이번 추가 제재의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음.
- 일본 정부는 주말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고 북한에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음.

● “日, 천안함 관련 조총련 제재 확대 추진”(5/26)

- 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고위 인사에 대한 일본 재입국 금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 문제 등과 관련해 조총련 고위급 인사 6명에 대해 일본 재입국 금지 규제를 부과했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재입국 규제가 적용되는 조총련 인사가 약 20명 늘어나게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조총련 지도부가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 日, 北선박 입항금지 확대 검토(5/25)

- 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과 관계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5일 보도했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



통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제재 방안과 관련, “만경봉호 등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은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과 북한이 임대한 외국 국적 선박도 입항을 금지할 수 있지만 2004년 법 시행 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음.

-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입항한 선박에는 국제항해선박·국제항만시설 보안보호법에 근거해 직전 10개소의 기항지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해상보안청은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에 대해 보안요원이 직접 선박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연간 200척에 달함. 일본 정부는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 가능한 상한액(1천만 엔)과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반입 가능한 현금상한(30만 엔)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간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은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대북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등의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일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중·일 3국과 공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한미와 긴밀한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日,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한계”(5/25)

- 일본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한국 미국과 공조해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선언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 외에 한미 군사훈련 동참 등 다각적인 대북 압력을 검토하고 있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경제 제재의 경우 이미 대북 무역의 전면금지 등으로 추가제재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음.
- 일본은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 가능한 상한액(1천만 엔)과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반입 가능한 현금상한(30만 엔)의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 재일 총련 간부의 북한 왕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음. 하지만 외무성 간부는 “송금 규제의 강화는 인도적 송금 자체를 금지하는 문제가 있어 유효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06년 이후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금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사치품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실천하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북한을 겨냥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경우 해상검사의 주체를 자위대가 아닌 경무장 해상보안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검사 실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니혼케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가 미국 한국과 공조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참여할 여지는 아주 좁다고 전했다.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봉쇄나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할 경우 북한이 전투행위로 간주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전투행위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것도 현행법상 어려움.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실시할 대잠수함 훈련의 경우 자위대 활동의 조건인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기 어려워, '타국(한국·미국)과 일체화된 무력행사'로 비칠 수 있음.

마. 기타

● 유럽의회 대표단, 訪北 전격 취소(5/30)

- 의원 외교 차원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남북한을 방문해 온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올해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했음. 30일 유럽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내달 5~8일 북한, 8~12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었던 한반도관계대표단이 방북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한국만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음. 이 소식통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표단 방문이 북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크리스티안 엘러(독일)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협의, 방북 취소를 결정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 외교 당국도 엘러 대표에게 현 시점에 북한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엘러 대표는 이달 10~11일 브뤼셀을 찾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경과와 향후 대응 방침 등을 설명 들었으며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음. 한편, 북한 방문을 취소한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 9명은 방한 일정도 하루씩 앞당겨 6월7일 서울에 도착해 11일 떠나며, 방한 중 국회의장과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할 예정임.

● 러, 극동에 北난민 수용 훈련 지시<교도>(5/30)

-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국경을 맞댄 극동 지방에 북한 난민이 대량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발로 보도했음.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 극동지역센터 당국자는 최근 남북한 대립이 심각해짐에 따라 북한 난민이 대거 러시아로 몰려올 때에 대비해 난민 수용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훈련 개시 시거나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훈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난민 역할을 맡은 러시아 병사에게 식량을 배급하거나 치료를 하는 훈련을 할 예정임. 러시아 정부는 옛 소련 시절에



군 주둔지로 사용하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극동 연안 지방의 거주지역 8곳을 북한 난민 수용 시설로 예정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2003년 8월에도 연해주 바라바슈에서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을 가정한 ‘가상 비상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음.

● 러 외무차관, 北대사와 천안함 사태 논의(5/29)

- 알렉세이 보로다브키 러시아 외무차관이 28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전개 상황에 관해 세부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양측은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남북한 간 위기 해소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파라과이, 천안함 北도발규탄 성명(5/28)

- 파라과이 정부가 28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의 군사도발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리바스 알마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파라과이 정부 성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외교통상부는 전했다. 또 리바스 장관은 한국 측에 파라과이산 쇠고기 수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파라과이 측이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수입위험분석절차 개시 요청서를 제출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WFP, 대북 식량지원사업 2년 연장”<VOA>(5/27)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2008년 9월 시작된 대북 ‘긴급구호사업’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2년 6월까지 2년 기한의 새로운 구호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근 WFP 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에 대한 장기 구호·복구사업: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 보고서를 인용, “앞으로 2년간 자강도와 량강도를 제외한 북한 내 7개 도, 60개 군에서 고아원, 학교 등을 중심으로 식량을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고서는 내달 초 이탈리아 로마의 WFP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올려져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식량지원 대상이 종전의 6개 도, 62개 군, 200만 명에서 7개 도, 60개 군, 250만 명으로 25%(인원 기준) 확대됐는데, 특히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공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고서는 논란을 빚어온 ‘분배 감시’와 관련, “북한에 식량이 도착해 군 단위 기관에서 수혜자에게 지원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 EU, 내달 외무장관회의서 北 압박(5/26)

- 유럽연합(EU)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내달 정례 외무장관회의에서 대(對) 북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 직후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던 EU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공동보조를 취할 전망이다.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EU는 내주 27개 회원국 외교부의 아주국장 회의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한 이후 6월14일 예정된 정례 외무장관회의에서 가시적인 제재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됨. 이어 17~18일 열리는 상반기 마지막 정례 정상회의에서도 의장 결론에 대북 압박 내용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대북 외교적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형식이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음. 다만, EU가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통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 ‘후행’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처리되는 바에 따라 EU의 대응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EU는 작년 말 대북 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음.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국내법적 편입절차 없이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님. 당시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으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는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이자 실세들이 포함돼 시선을 끌었음. 추가된 13명의 개인 가운데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이외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포함됐음.

● 호주, 이란·북한 등 신속단독제재법안 추진(5/26)

- 호주 정부는 이란과 북한 등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단독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호주가 안보리의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이들 국가에 대해 제재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스티븐 스미스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 법안은 이란과 북한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태에 호주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로 드러난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행위 또한 호주 정부가 유엔의 조치를 보완하는 자체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할 필요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금까지 호주는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거나 유엔 제재가 없는 경우 각각의 법에 명시된 금융 제재(은행법)나 교역 금지조치(관세법) 등을 활용했음. 하지만 스미스 장관은 호주 정부가 미얀마나 피지, 짐바브웨 등의 국가들에 대해 안보리 결의 없이 제재를 의결해야 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주는 미국이나 유럽에 동조해 유엔의 합의 수준을 넘는 금융 제재와 여행 제한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음.

● 美언론, ‘남·북긴장’ 시장불안 요인 지목(5/26)

- CNN방송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25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점증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글로벌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일제히 꼽았음.
- CNN방송은 이날 뉴욕 주식시장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10,000선이 깨지는 등 ‘패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황을 전하면서 그 원인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과 유럽발(發) 채무위기를 지목했음. CNN방송은 “아시아 시장이 어제 한반도에서 점증하는 긴장으로 인해 뒤흔들렸다”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고 소개했음.
- NBC방송도 아침시간대 간판프로그램인 ‘뉴데이쇼’ 뉴스시간을 통해 25일 아시아 증시가 크게 떨어진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긴장상황 때문이라고 보도했음. 또 폭스비즈니스뉴스는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채무위기와 남·북한 간에 조성된 새로운 긴장이 다우지수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0선을 깨는 등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 공영라디오방송(NPR)은 뉴욕 증시의 시황을 속보로 전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에 더해 남·북한의 긴장고조가 주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인 47% “北 남침시 한국 군사지원해야”(5/27)

- 미국인의 47%가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미국 여론조사 전문 매체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24~25일 미 전역의 1천명을 대상으



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한 반면, 25%는 반대했으며 28%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 또 남·북한 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56%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14%가 “매우 가능성이 높다”, 29%가 “당분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답변했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미국의 동맹국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4%가 한국이 동맹이라고 바르게 답한 반면 4%는 한국이 적국이라고 혼동했으며 22%는 어느 쪽인지 가려내지 못했다.
- 또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는 이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국, 북한이 그 뒤를 이었음.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 포인트임.

● 한·미, 대북감시태세 평시보다 강화(5/26)

- 한미 군 당국은 26일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수준을 평시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가 시행되면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가 협의해 오늘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5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정보수집 수단과 감시횟수, 정보분석요원이 보강됨. 워치콘 ‘5’는 징후경보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 ‘4’는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 ‘3’은 위협이 점증하고 있어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임. ‘2’는 국익에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되며 이때 첩보위성의 사진정찰,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다양한 감시 및 정보분석 활동이 강화됨.
- 소식통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부대, 미사일기지 등에서 이상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군에 전투준비태세 명령이 하달됐다는 첩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오후 늦게 대북 전단지 살포작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상 여건이 나빠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클린턴 “李대통령, 강력한 리더십 보여줬다”(5/26)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천안함 사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40분까지 50분간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clear and unmistakable)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천안함 관련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



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전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한 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음. 클린턴 장관은 이어 “이 대통령이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있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역 문제는 물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음.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 미국 정부가 즉각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준 데 대해 온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음.
-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우리 측에서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음.

● 한·미·일, ‘천안함’ 안보리 회부 협의(5/26)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6일 오전 서울에서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후속 대응방안을 협의했음.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3국은 특히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점을 중시하고 이번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조신히호텔에서 조찬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우리 측은 미·일 양국에 전날 진행된 위성락 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간 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3국 고위 관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수위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 본부장은 전날 우 특별대표에게 미리 한·미·일 3국 당국자들의 회동 계획을 설명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한·미·일 3자 회동은 오전 9시30분까지 계속됐으며 이후 오전 9시30분부터 한·미 협의가, 오전 10시30분부터 한·일 협의가 각각 진행됐음.



● <한·미 ‘천안함 동맹’..대북압박 가시화>(5/26)

- 한·미 양국이 26일 가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천안함 동맹’을 공식 확인했음. 천안함 사태를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공통의 대응기조를 다지는 계기였음. 이는 단순히 한·미 공조 스탠스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을 겨냥한 양국 공동의 후속조치가 매우 높은 강도와 수위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특히 클린턴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취한 대응조치들은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들로서 미국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주목됨.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응기조가 북한에게 실질적 고통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압박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옴.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취할 ‘액션’이 일정한 방향성과 윤곽을 드러냈음.
- 우선 미국은 한국 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침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다자 틀을 통한 대북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음.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무대에 올랐을 때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대북결의안 채택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특히 클린턴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대중(對中)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 눈에 띈. 클린턴 장관은 “중국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우려사항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그러나 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강구중인 독자적 양자조치들임.
- 미국은 과거 부시 행정부 때 완화 또는 해제됐던 ▲적성국교역법 재적용 ▲테러지원국 재지정 ▲애국법 301조 적용방안 등 다양한 금융·경제제재 조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최고위층과 군부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 금융제재 조치들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다만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다른 형식의 새로운 제재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클린턴 장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은 바로 이 같은 조치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또 한·미 양국이 굳건한 방위동맹을 과시하며 합동군사훈련의 구체적 강화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북한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높음.
- 클린턴 장관은 “나는 중국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밝혔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미국군은 추가적인 강화조치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



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 ▲6월말 또는 7월초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 ▲‘팀스피리트 연습’과 유사한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회견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클린턴 장관이 천안함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임.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즉각적 위기에 대해 아주 강하고 계산된 대응책이 필요하며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비핵화 협상을 위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천안함 문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만 앞으로 일정한 계기점을 맞을 경우 미국도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 따라 천안함 국면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일단락될 경우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동하려는 중국 측의 의지와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미·중은 24~25일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천안함 처리와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집중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임.
- 한·미 간의 이 같은 ‘천안함’ 동맹은 한·미·일 공조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음. 이날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설득의 ‘공’을 넘겨받은 한국 측은 2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을 상대로 최고위급 설득에 나설 예정임. 29~3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일이 공조전선을 펴며 중국 측을 압박하는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랭글 의원, ‘한국전 60주년 결의안’ 발의(5/26)

-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25일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음. 이로써 지금까지 하원에 제출된 한국전쟁 60주년 관련 결의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샘 존슨(공화·텍사스주)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포함해 3개로 늘어났음.
- 랭글 의원은 결의안에서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미 군병사 및 동맹국 병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봉사를 기리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념활동에 모든 미국민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음. 결의안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하는 선언문을 내도록 요청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특히 결의안은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강조했다.

● 한미 해군, 대북 군사적 조치 협의(5/25)

-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25일 주한 미 해군사령관인 피트 구마타오 타오 준장을 충남 계룡대의 해군본부에서 만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 시행을 위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김 총장과 구마타오타오 사령관은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조치와 6~7월 중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올해 하반기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해상차단 훈련 등 대북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해군은 전했다.
- 구마타오타오 사령관은 “한국 해군의 대북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 미 해군사령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한미 해군의 연합 훈련 협조 논의도 작전사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김 총장은 구마타오타오 사령관에게 사건 직후 미군 함정을 긴급 투입해 탐색 및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합조단에 참가해 원인 규명과 조사결과에 신뢰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서해에서 실시되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모전단을 파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순양함 등으로 구성됨.

● 클린턴, 한반도 정세 “매우 불안정한 상황”(5/24)

- 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이는 북한이 역내에 야기시킨 매우 불안정한(highly precarious)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교전과 도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클린턴 장관의 수행 기자 브리핑 녹취록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인접국들이 이런 상황이 억제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또 중국과의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공동대응 협의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와 매우 집중적인 협의를 벌이는 중”이라면서 “중국도 우리가 직면한 상황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대응을 이해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특별한 책임도 역시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매우 잘 협력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똑같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 측과 매우 좋은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전날 밤 만찬에서 매우 소수의 인사들끼리 2시간 30분 동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도 같은 시간 정도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이(천안함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협력 방침을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의 구체적인 향후 대응조치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거론되는데 대해 “미국은 그 증거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지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북한의 행동들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만일 증거가 부합한다면 국무부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다만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와 관련, 미국은 사실이 부합할 때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그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법은 국무장관이 결정을 하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을 번영과 안보로 이끄는 길은 도발행동 및 이웃들에 대한 협박과 호전 정책을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美, 서해훈련 때 핵무기 탑재 가능”<中전문가>

- 미국은 조만간 서해상에서 실시될 대규모 한미해상합동훈련에서 핵장비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관영 방송 CCTV의 특약평론원인 송샤오쥘(宋曉軍)은 26일 CCTV의 대담프로인 ‘환추스쥘’(環球視線)에 출연, 이같이 전망하고 한미가 서해상에서 상륙작전을 벌이면 6자회담 재개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평론원은 한미는 천안함 사건을 국제화해 유엔에서 해결할 시도를 하고 있고 대북 무력공격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도 선제공격을 할 것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 사회자인 라오춘옌(勞春燕)은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함께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오젠이(朴建一)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이 프로에서 한국이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대북 심리전에 들어가면 북한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양측 간 충돌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확성기를 통한 대북방송은 북한 군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나. 한·중 관계

● “中, 천안함 시비가린 후 누구도 비호 않겠다”(5/28)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8일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시간여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원 총리는 또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이 그동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날 원 총리의 발언은 비록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북한을 무작정 비호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됨. 원 총리는 특히 “중국이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고, 원 총리는 “한국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만큼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이 수석은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매우 절제되고 균형 잡힌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단순히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비전도 나타냈다는 점에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6자회담과 관련, “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원 총리가 북한의 메시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장관 레벨 등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외교 “中 건설적 역할 기대”(5/27)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천안함 사건 후속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와 관련, “사실(조사결과)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그런 입장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상임이사국이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공식방한 계기에 중국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향후 안보리 회부절차와 관련,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미국과 일본,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해나갈 것”이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이 화폐개혁에 실패한 이후 사회불안이 증폭된 것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군부의 영향력, 한반도 내부의 분열 획책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민에게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충격을 줬다”며 “한국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더욱 강경한 반응을 하고 (행동조치를) 발표하는 게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북한은 지금 어려운 길을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의 새로운 길을 가느냐 두 갈래 길의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천안함과 중국> ①중국을 바라보는 한국(5/27)

-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표정이 복잡 미묘해 보임. 천안함 사건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실망하고 분개하는 여론과 중국의 달라진 위상과 한·중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기류가 한데 뒤엉켜있는 흐름임. 똑같은 중국을 놓고도 우리사회 내부의 이해도와 기대치가 얼마나 상이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셈임. 천안함 후폭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중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단연 우세함.
- 겉으로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주요 2개국)의 위상을 과시하면서도 막상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민감한 현안이 등장하자 ‘책임 있는 대국(大國)’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비판론의 골자임. 여기에 한국에게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며 경제적 실리확대에 주력하면서도 정작 천안함 사건과 같은 정치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전통적 혈맹(血盟)인 북한을 편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불쾌한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음. 특히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중국 측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여기에는 이달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도 한몫했음. 천안함 사태의 와중에, 그것도 한·중 정상회담만 지 불과 사흘 만에 우리 측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락’한 것이 우리 사회의 대중(對中) 여론에 영향을 끼쳤음. 이는 국민적 여론이 집약적으로



로 표출되는 정치권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한 나라 당 정몽준 대표가 이달 초 “천안함 사태 외중에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실망이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어 지난 21일에는 “중국에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음.

- 행정부 차원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달 초 장신썬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 일이 거론되고 있음. 현 장관은 “북한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자칫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소지를 감수한 조치였음.
- 그러나 외교가를 중심으로는 보다 냉정한 관점에서 중국의 실체를 바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임. 당장 중국이 불만스럽더라도 성급하게 중국을 몰아세우는 듯한 태도는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임.
-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태도를 안보적 이해와 중국외교의 특성을 들어 설명하고 있음.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정세의 갈등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안보적 과제이고 미국에 맞서 역내 질서를 주도하려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클 수밖에 없음. 천안함 사건을 놓고 시종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임.
-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중국 외교도 주목할 요인임. 특정현안을 놓고 외부에서 공개적인 압박이 가해질 경우 이를 수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직된 자세를 보인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임. 이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 코너로 몰아세우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태도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외교적 지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이 같은 신중 접근론에는 중국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현실적으로 미국과 함께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를 좌우하는 양강이면서 우리나라 대외교역액의 5분의 1이 넘는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동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임.
- 주목할 대목은 최근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리 유연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임. 1948년 이후 전통적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이 최근에는 부쩍 남북을 상대로 한 ‘등거리 외교’를 신경 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임. 한 외교당국자는 27일 “경제적 현실로 볼 때 중국으로서도 북한만큼 이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중국도 고민이 있다”고 말했음. 외교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천안함 사건이 한·중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소득”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견실하게 발전시키려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천안함과 중국> ②中, 北에 기울었나(5/27)

- 중국은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냉정과 절제'를 표방하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한국과 미국의 '설득과 채근'도 불구하고 중국의 태도는 요지부동처럼 보임. 그래서 중국 외교의 무게추가 '전통의 혈맹'인 북한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지난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을 고수했음.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확실한 언급'을 강조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의 주요 국가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행보임. 심지어 중국 자체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의 합조단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뜻도 내포돼 있어 보임.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와 북한의 반응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됨.
- 중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했음. '냉정과 절제'를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결국 전략대화에서는 "한반도 안정 유지에 미·중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천안함 사건을 회부해 대북제재 결의를 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끝내 비켜간 것임.
-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도 지난 25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원칙론을 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실 중국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조절된' 논평을 내놓는 외교부 대변인을 제외하고 공산당과 국무원의 외교라인 모두 가급적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임. 당과 정부 기관지 성격의 언론매체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한 주장을 사실관계 위주로 비슷한 크기로 전하고 있음. 기계적인 중립 의도가 물씬 느껴지는 관변의 분위기는 언론매체를 접하는 중국 식자층으로 가면 방향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현지의 흐름임. '북한동정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임.
- 통신과 방송, 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는 물론 심지어 인터넷 매체까지 사실상 정부 통제로 '의도된' 여론을 생산하는 중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런 여론의 향배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있음.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27일 "중국 지도부는 남북한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는 않으면서 여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이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은 한국으로선 중국



의 태도에 적지 않은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임. 북한의 소행이 분명한 상황에서 ‘냉정과 절제’는 암묵적인 북한 편들기로도 받아들여지는 탓임. 이와 관련해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성장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시대의 ‘도광양晦(韜光養晦: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유소작위(有所作為: 문제가 생기면 적극 개입해 푼다)’와 ‘굴기(굴[山+屈]起: 우뚝 일어섬)’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 이를 일종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으며 최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천안함과 중국> ③중국의 속내는(5/27)

- 중국이 남북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이른바 ‘중립스텐스’를 취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적어도 1992년 한·중 수교이후 남·북한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비쳐져 왔던 모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중국은 특히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고조될 때마다 ‘냉정과 절제’를 주문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제시해왔고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패턴을 재연했음.
- 중국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에서부터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까지 시종일관 ‘실체적 진실’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누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혀 이런 입장을 확인했음.
- 그러나 의견상 중국의 기계적인 중립 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묵적인 북한 편들이 감지됨. 특히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매체들의 천안함 사건 관련 보도는 북한 동정론에 가깝다는 게 현지의 분위기임. 그 배경을 놓고 많은 해석이 나옴.
-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초래될 경우 불가피하게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며 이럴 경우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암묵적인 북한 편들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작년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874호가 실행되는 와중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초래될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 중국이 ‘중립 표방 속 암묵적 북한 편들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음. 다시 말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과 체제 존립 위협



이 심화돼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불안이 조성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가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임.

- 일각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북·중 간 <동북3성 진흥계획과 라진항 개발 계획>’이 중국의 천안함 사건 관련 스탠스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중국 정부가 지린(吉林)성의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이어 낙후지역인 동북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계획의 핵심인 북한 라진항을 통한 ‘동해 출항권’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 보호에 나섰다는 분석임.
- 중국은 그러나 이런 암묵적인 북한 편들기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구시보가 2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외부세계의 의혹에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힌 데서도 이런 전조가 보임.
-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미 행정부가 차후 북한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한미 공동 대잠수함 훈련계획을 포함한 군사 대비태세 강화에 나섰다거나 하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를 공식화하는 등 한·미·일 3국의 일치된 대응이 강화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그로인한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 변화로 중국이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임.
- 이런 맥락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 24일 돌연 자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서울에 보낸 것은 곱씹어볼 만하다는 지적임. 천안함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포괄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옴.

● <천안함과 중국> ④한·중 전문가진단(5/27)

-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시각도 복잡했음. 중국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전통의 우방’인 북한의 편에 설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중국에 가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동참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음. 특히 중국 측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남북 간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했음.
- 한 중국 전문가는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 “과학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군 합동조사를 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음.



다음은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가나다 순)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외교적 조치를 취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구도 때문에 제한적임.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중국이 어떤 경우라도 한국의 입장을 100% 두둔하는 것은 힘들 것 같음. 객관적 조사결과로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임. 이는 중국이 한국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봄. 또 북·중관계는 전통적으로 중요성도 있음. 중국은 이 사건 때문에 한반도가 급격히 불안한 정세기조로 가는 것이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상황을 유지관리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음. 정부는 외교적 대안이 제한돼 있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만큼 묘수가 별로 없을 것임. 우리 정부는 안보리로 이 사건을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음.
-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북한을 엄중하게 비판하는 내용과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담고 있음. 남북관계의 긴장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큼. 한반도 각국의 근본 이익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해 중국 정부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라고 강조할 것임. 목적은 바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임.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프로세스는 후퇴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안정에 불리함. 중국은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이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임.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은 엄격히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통제 불가능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임. 유엔은 1718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유엔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군사충돌 자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임.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중국도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것임. 미묘한 시점에 김정일 방중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왔는데 ‘빠도 박지도’ 못할 증거가 나왔음.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 중국도 유엔 상임이사국이어서 언제까지 북한을 두둔하기는 곤혹스럽고 당혹스런 상황일 것임. 중립적인 입장만 취하기는 어렵다고 봄. 사실 중국도 자세가 전환됐다고 생각함. 얼마 전 중국 외무성 연구원이 쓴 칼럼을 보면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지만 균형외교를 취해야 한다고 했음.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중국이



한국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시기에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해야 함. 다만 명시적으로 중국에 요구하기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 하도록 유도해야 함. 천안함 사건이 유엔안보리에 회부되도록 노력해야 함. 다만 중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돼도 내용을 툴다운시키도록 노력할 것임.

- ▲장렌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조사의 진전과 증거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론을 얻어냈음. 한국은 조사결과의 과학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군 합동조사를 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결론을 도출했음. 이는 중대한 문제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만함.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어떤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도 안 되며 한쪽을 위해 죄가 없다고 변론해서도 안 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인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함. 한국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외교, 경제,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할 것임.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북한이 전쟁을 언급하며 반발하는 것도 전형적인 전술이기는 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있음. 천안함 사건 발생은 한반도 비핵화가 파괴된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 한반도 비핵화가 깨진 뒤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너무 선량한 염원(순진한 생각)일 뿐임. 한국이 휴전선 일대에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심리방송을 시작하면 북한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국지적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규모 충돌로 확산되진 않을 것임.

● 中 “천안함 결과 여전히 평가 중”(5/26)

-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음. 장즈진(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천안함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장 부부장의 이 발언은 원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자체 평가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임.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후 ‘남북 관계 전면차단’이란 강경대응을 한 북한에 대해 냉정과 절제를 주문했음. 장 부부장은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사태의 추이와 유관 당사국의 반응에 크게 주목해 왔다”면서 “각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란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해 냉정하고 적절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장 부부장은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의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천안함 사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와 관련, “중국과 미국 양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시했다”고 말했음.

● 中 “동북아평화 해치는 행위 결연히 반대”(5/25)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25일 밝혔음.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누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동북아 및 한반도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공통된 책임”이라면서 “중국은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제 문제를 처리한다”고 말했음. 장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이웃국가로서 천안함 사태 추이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시종일관 대결보다는 대화, 긴장보다는 화해가 낫다고 판단하며 진정으로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반도의 긴장 악화를 방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장 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남북 양국의 이익과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은 완료됐느냐’는 물음에 “(중국의) 자체 평가에 대해선 설명할 게 없다”고 답변했음.
- 그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한다면 이는 냉전시대의 유산이 아니냐’, ‘중국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잇따른 지적에는 “기자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음.



- 장 대변인은 천안함 사태가 마무리된 후 북·중 지도자 간의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한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북한의 반응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그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 “주한 중국 대사의 요청으로 간 것”이라며 “한국 측과 (천안함 사건과 북핵 6자 회담 등의)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음. 또 ‘우 대표가 방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소식을 들은 것 없다”고 덧붙였음.

● <李대통령 담화 中 전문가 반응>(5/24)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 남북 관계의 긴장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했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신중한 자세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태도를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자체 평가분석을 거쳐 북한의 소행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음.
-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중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반응은 마자오취(馬朝旭) 대변인의 발언에 잘 담겨 있음. 첫째로 한국에 애도와 위로를 표명했고 두 번째로 시시비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임. 이는 중국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세 번째로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세 악화 방지의 전제조건이란 입장임.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를 보면 개인적으로 한국의 태도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함.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 경협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군사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음. 균형감과 냉정과 절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북한이 추가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한국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므로 냉정한 태도로 볼 수 있음. 선박 통행금지와 남북경협 중단은 한국 자체의 조치로 중국은 공식 의견을 낼 수도, 낼 권리도 없음. 그러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견해와 유사함. 중국은 유엔에 상정될 경우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지만 사실관계 확인 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제재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임. 6자회담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임. 한반도에는 긴장이 가득하고 한국은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함. 이는 남북 경협과 6자회담 재개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것임.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실제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쫓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할 것이며 실제로 북한이 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것임. 이는 분노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임.



-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는 북한을 엄중하게 비판하는 내용과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담고 있음. 남북관계의 긴장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큼. 한반도 각국의 근본 이익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해 중국 정부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라고 강조할 것임. 목적은 바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음. 남북 경협은 곡절을 겪으면서도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돌발적인 사건으로 중단되는 것은 확실히 유감스러운 일임.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프로세스는 후퇴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안정에 불리함. 중국은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이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임. 북한은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강력히 북한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서해 지역은 지금까지 3차례의 해상 충돌이 있었음. 한국 역시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음.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은 엄격히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통제 불가능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임. 유엔은 1718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유엔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군사충돌 자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임.
- ▲진징이(金京一)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중심 부주임 = 남북관계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느낌임. 이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 이런 상징성을 띠고 있고 올해가 6.25 발발 60주년인 점을 생각하면 다시 6.25 직전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함. 남북이 팽팽한 대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우발적인 사건도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음.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통행금지과 남북 교역 중단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자세가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라고 생각함.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함부로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해서 풀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은 평가받을 만함. 한국이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를 수락, 싸우는 가운데서도 대화를 문을 열고 북한에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임.

● 中전문가 “韓 천안함 대응 잘했다”(5/23)

-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과학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했으며 높이 평가했음. 그



러나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이 기고문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삭제돼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함.

- 장렌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20일자 중국 신민망(新民網)에 올린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조사의 진전과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론을 얻어냈다”면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조사결과의 과학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군 합동조사를 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문제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만하다”고 호평했음.
- 장 교수는 기고문에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태도도 주문했음. 그는 “중국은 이 문제에서 어떤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도 안 되며 한쪽을 위해 죄가 없다고 변론해서도 안 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인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한국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외교, 경제, 군사적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는 한국의 발표 직후 전쟁을 언급하며 반발한 북한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전술이기는 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 장 교수는 “천안함 사건 발생은 한반도 비핵화가 파괴된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깨진 뒤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너무 선량한 염원(순진한 생각)일 뿐”이라는 말로 칼럼을 마무리했음.
-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보다는 한국 쪽으로 기운 중국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이 기고문은 게재된 다음날인 21일부터 신민망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됐음.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기고문 내용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다”면서 “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은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韓日정상 ‘천안함 공조’ 거듭 과시>(5/29)

-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굳건한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대응을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높이 평가한 뒤 한국 정부가 대북 결의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처리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음.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은 국제공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못지않은 강력한 협력 의사를 밝혔음.

- 이에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 천안함 46용사가 잠든 합동묘역을 찾아 조문하기도 했음.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같은 하토야마 총리의 성의 있고 협조적인 태도에 거듭 사례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총리가 이처럼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최근 외교 기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임. 다만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논란의 여파로 하토야마 총리가 사퇴를 요구받는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본격 추진 문제도 중요한 화두였다는 후문임. 한일 정상은 이날 양국 간 FTA 체결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의 체계를 한 수준 높임으로써 협상 속도를 높이고 내용도 내실화하자는 데 합의했음. 구체적으로는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격을 현재의 과장 또는 심의관급에서 국장 또는 차관보급으로 올리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앞으로 100년의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FTA 협정 체결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한일 FTA 체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함에 따라 양국 관계부처 간 협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한국의 세계적 기업이 일본에서 철수했다”며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일본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음. 이밖에 두 정상은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추진과 관련, 종합인증 우수업체 상호인증제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 日총리, 한국연구센터 개소식 참석키로(5/27)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일본 대학교의 한국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음. 도쿄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달 5일 오후 1시께 도쿄대 후쿠타케(福武)홀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하마다 준이치(濱田純一) 도쿄대 총장, 권철현 주일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한국연구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27일 밝혔음. 하토야마 총리는 개소식에서 축하 인사를 할 예정임.



- 현직 일본 총리가 특정 대학교의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 도쿄대는 그동안 근대사를 연구하는 한국·조선 연구실만 두고 있었지만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현대한국의 모습을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기로 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이 연구센터가 표방하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주목하고 개소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센터장은 재일교포 2세인 강상중 교수가 맡고 한국 정치를 전공한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와 이시다 히데타카(石田英敬) 교수 등 13명의 교수가 연구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자문으로 참여함.
- 이 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일 파트너십 ▲현대 한류문화의 아시아적 환류 ▲서울·도쿄·베이징의 도시 간 교류 등을 연구할 예정임. 교류재단 관계자는 “이 연구센터는 일본 내 한국학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과거사와 독도문제 같은 한일관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캠프 “中, 北 천안함 개입 인정 쪽으로 기울 것”(5/28)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 “중국이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미국공영 라디오방송(NPR)에 출연, 지난 일주일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해 현지의 민간 전문가, 군·당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사흘간 중국에 머물면서 거의 모든 레벨에 있는 민간, 군, 당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중국 측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따라서 이번 천안함 조사에 대해 많은 질문도 있었다”면서 “솔직히 말해 현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으나, 수면하(下)에서는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 그는 천안함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됐을 때 중국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최근에는 이란(핵문제)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지지를 얻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조만간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중국의 남북 ‘등거리 외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도 불편해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번만큼은 우리 쪽 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이날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 상호교류의 문을 여전히 열어놨었다”고 반박했음. 캠벨 차관보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절제되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러는데 미국과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음.

- 한편 이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도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2012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셔먼 전 조정관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가 중단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성공단만큼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모든 것이 “내리막 길”은 아니라면서 장기적으로 6자회담의 기능을 포함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美, 중국 對북한 비판에 동참 전망” <AP> (5/27)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중국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26일 보도했음.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중국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 즉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공격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입장에 조심스럽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음.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주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문 기간에 중국이 그동안 천안함 사태에 관해 견지해온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비판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특히 원 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는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중국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이 전했다.

● 美·中, 한반도 안정유지에 의견일치(5/26)

-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한반도의 안정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5일 밝혔음.
- 이번 회담의 공동의장 가운데 한 명인 다이 국무위원은 이틀간의 일정 폐막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바탕으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측의 공동의장 중 한 명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라며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또 “지난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통과, 이행하는데 협력했다”고 상기시키고 “이제 우리는 천안함 침몰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도전을 풀어나가는데 함께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앞으로 국제사회 및 중국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은 베이징에서 협의를 시작했으며, 두 나라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미·중 양국은 베이징(北京) 닌타이(釣魚臺) 5호각과 17호각에서 각각 전략대화와 경제대화를 진행했으며 전략대화에서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를 집중 논의했다. 클린턴 장관은 회담 내내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발사로 침몰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의 천안함 사건 회부를 제안하면서 중국 측과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미 행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한미 공동 대잠수함 훈련계획을 포함한 군사 대비태세 강화에 나섰으며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에 대해 호응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중국 측은 회담 기간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 시종일관 냉정과 절제를 강조했다.
-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우리는 대결보다는 대화가, 긴장보다는 화해가 낫다고 판단하며 진정으로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한반도 긴장악화를 막기를 희망한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혀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이런 가운데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24일 한국을 방문해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예방에 이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우 대표의 방한을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후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장국으로서 북핵 6자회담 프로세스를 개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음.



● 미-중, ‘환율 싸움, 우리가 이겼다’(5/26)

- 미국과 중국이 갓 끝난 두 나라 전략경제대화에서 위안 환율 문제에 관해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팀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25일 베이징에서 가진 블룸버그-TV 회견에서 중국이 위안 절상을 다시 허용하는 것이 자기네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임을 이번 접촉을 통해 “확실했다”고 밝혔다. 가이트너는 그러나 이 날 앞서 전략경제대화 폐막 연설에서는 “(위안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물론 중국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막 기자회견에서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언제 발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시간이 올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론 커크 미 상무장관도 중국 측이 지적재산권과 시장 접근에서 진전을 보일 경우 이것이 환율 개혁보다 미국에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반기 환율 보고서는 당초 지난달 중순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보고서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임.
-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장조리(차관보)는 25일 대화 폐막 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 환율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분명히 이해했다”면서 “(환율 문제에 관한) 외부 잡음은 개혁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이 모두 남유럽발 위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오는 6월의 토론토 G20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경제대화 중국 측 공동 대표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25일 “미국과 중국이 모든 사안에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했다.

● <美中회담, 주요 합의·논의 내용>(5/25)

-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경제·무역 협력방안을 비롯한 양자문제와 천안함 사태, 이란 핵문제 등 국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25일 폐막한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무역, 수출입 투자, 원자로 개발, 위생, 환경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총 8건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제한과 중국의 정부조달 정책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을 봤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란 핵문제, 위안화 절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치러진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합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 ◆에너지, 환경, 원자로 개발 합의 = 미중 양국은 녹색협력 파트너 계획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비롯해 양국 세관 간 협력, 에너지분야 부처 간 협력, 양국 수출입은행간 융자 및 결제에서의 협력, 의료설비 융자 프로젝트 및 환경보호형 전선설비 협력, AP1000 원자로 건설 분야 협력, 전염병 예방 등의 분야에서 모두 8건의 양해각서



및 협정에 서명했음. 이번에 서명된 문건은 총 8건이지만 양국이 실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분야는 총 26개에 달한다고 양제츠 중국 외교 부장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덜 민감한 분야인 에너지와 환경, 투자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면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경제·무역 갈등 의견 접근 = 이번 미·중 경제대화에서는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 대신 무역장벽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음. 미 무역적자는 2009년에 2천268억 달러로, 2008년의 2천680억 달러와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됐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더 조정돼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음. 양국이 서로 민감해 하는 경제분야의 조치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 중국은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제한 해제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보호무역주의 타파에 협상의 초점을 맞췄음.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한 단계 개선하려면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제한이 종료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종료 시간표’ 제출을 요구했음.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략경제 대화 개막에 앞서 미국 행정부가 올해 중반에 대중 첨단기술 판매 검토 보고를 마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이 조치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음. 미국은 특히 중국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정부 주관 조달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종일관 공정경쟁의 목소리를 높였음. 가이트너 장관은 “미·중 양국의 공동이익은 공정경쟁을 통한 세계무역 시스템 강화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의 더 많은 개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미국은 외국 IT(정보기술)기업이 정보보안제품 정부조달에 참여하려면 소스 코드를 공개토록 한 중국의 이른바 ‘자주 창신’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음.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정부조달 관련 정책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안화 환율, 시장경제 지위 등은 이견 = 경제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여겨졌던 위안화 환율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역시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고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폐막 회견에서 “재정 및 무역이슈와 관련해선 진전을 이뤘으나 골치 아픈 이슈인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는 추가적인 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에서 위안화 환율과 관련, “주동적이고 통제적이고 점진적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위안화의 환율 결정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환율은 중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문제와 관련,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금융위기 와중에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경제정책에 국가개입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을 압박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 ◆천안함, 이란핵 문제 집중논의 = 미·중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5일 밝혔다. 다이 국무위원은 이틀간의 일정 폐막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회담 내내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발사로 침몰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의 천안함 사건 회부를 제안하면서 중국과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에 호응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음. 양국은 또 중동의 최대 불안 요인인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음. 현재 브라질과 터키의 중재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터키로 반출하는 합의안이 제출됐으나 미국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4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임. 미측은 안보리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선뜻 동참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감한 문제는 뒤로 = 구글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자유 제한을 이유로 중국 시장 철수 의지를 밝히면서 촉발된 미·중 갈등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강행으로 그 수위가 높아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미를 백악관으로 초청, 면담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었음. 이 문에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들과 관련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음.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전략대화에서 이와 관련해 이전과는 달리 완화된 입장을 보였으며 중국 측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마차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24일 대만과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는 수준의 언급만 했음

● 클린턴 “미·중, 천안함 北제재 공조해야”(5/24)

- 미국과 중국 간 제2차 전략경제대화가 24일 개막된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중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된 데 대해 북한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된 현 상황은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공조해 이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주변국에 대한 위협적, 호전적인 정책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실행을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국제법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에게 이란 핵문제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이날 개막사에서 북한과 이란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음. 다이 위원은 “대립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계획하는 어떠한 시도도 오늘날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시도는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날 개막식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으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축사를 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음. 개막식을 마치고 양국 대표단은 다오위타이(釣魚臺)로 자리를 옮겨 다오위타이 5호각에서 전략대화를, 17호각에서 경제대화를 진행하고 있음.

● “美·中, 천안함 대응 이견” <美관리> (5/24)

-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음.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까지도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중국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날 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베푼 비공식 만찬에서 자신들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거론했음. 클린턴 장관 일행은 이날 다이빙궈 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 등 중국 측 대표들을 만나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을 공유했음. 미국 측은 또 중국에 한·미 양국이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무거운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양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세세한 외교적 의례를 과감히 생략한 채 만찬 도중 바로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 동북아시아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미 정부의 태도를 뚜렷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측은 이달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그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했다.
- 그러나 미국이 24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대응조치에 미리부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중국은 여전히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음. 미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수십 년간 이런 일을 마주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발표할 모든 대북 조치를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그



고 있음. 미국도 이런 하토야마 총리의 변화에 만족감을 표시했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후텐마 방향 전환에 대해 “지금까지의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8일 오전 하토야마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음.

- 이날 발표된 두 나라의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은 미일동맹이 일본의 방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전 및 번영에도 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음. 동북아시아에서 안전보장정세의 최근 전개에 따라 미일동맹의 의의가 다시 확인됐다”고 선언했음.
- 북한의 공격에 의한 한국의 천안함 침몰이 양국 동맹의 의의를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후텐마 이전 문제의 신속한 종결이 불가피하다는 뜻임. 따라서 일단 걸으로는 후텐마 이전안에 대한 합의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계기로 미일 동맹관계가 후텐마 문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작년 9월 이전으로 복원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정권 핵심부의 정치자금 문제와 각종 정책의 불협화음으로 리더십을 잃고 지지율이 추락한 하토야마 정권에 신뢰를 보낼지는 불투명함. 일본 정부가 후텐마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공법, 일정 결정 등에서 말을 바꾸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오키나와 주민 설득에 실패할 경우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있음.

● 美日, ‘후텐마 헤노코로 이전’ 성명(5/28)

- 일본과 미국이 양국의 외교·국방 현안인 오키나와(沖繩)의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음. 일본은 작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후텐마 문제를 기존 합의안을 거의 수용하는 형태로 봉합함으로써 미일 동맹 복원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 후텐마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음.
- 일본과 미국 정부는 28일 오전 양국 외무·국방장관(2+2) 협의체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명의로 후텐마 이전안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앞서 하토야마 총리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갖고 두 나라 외무·국방장관이 합의한 후텐마 이전안을 최종 확인했음.
- 두 나라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후텐마 기지를 기존 합의안인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의 미군 캠프슈워브 연안부와 주변 해역에 1천800m의 활주로를 건설해 이전하기로 했음. 또 일부 훈련은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徳



사. 기타

● 한·일·중 협력사무국 내년 한국에 설치(5/29)

-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내년 한국에 설치함. 또 앞으로 10년 동안 3국간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비전을 담은 로드맵 ‘비전 2020’도 채택키로 했음. 이명박(MB)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3국 정상회의 1차 세션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음.
- 한·일·중 협력사무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신규 협력 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 작성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사무총장은 3국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며 운영비도 협정 체결을 통해 분담함. 모두 41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전 2020’은 치안 당국 간 협력 강화,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경제통합 추구,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마약퇴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 기술의 공통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보건의학 기술, 오염 방지·폐기물 처리 기술, 정보기술(IT) 분야의 협력, 자연재해 대응력 공동 강화 등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했음. 이밖에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 ▲치안협의체 구축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방문 ▲녹색경제 세미나 정례화 ▲순환경제 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개최 ▲한·중 외교관의 일본 단기연수 등 7개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음.
-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가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면서 “향후 10년간 4가지 방향에서 3국 협력의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되므로 3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특히 “금년 내 투자협정 체결로 성공적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3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 통합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3국 투자협정이) FTA를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나름대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방, 치안, 재난 분야 등 3국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정부 간 협의체가 활성화됨은 물론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음. 아울러 “3국 간 경제·통상 및 제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3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합과 우의를 증



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 이밖에 이 대통령은 “3국이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 안정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국제경제 위기 공동대응, 기후변화, 그리고 3국 간 협력이 필요한 테러와 마약, 식품 안전 등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美 새 ‘국가안보전략’ 뭘 담았나>(5/28)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7일 취임 16개월 만에 미국 국가안보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은 지침서 격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공개했음. 날 베일을 벗은 52쪽 분량의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스마트파워’ 외교를 집대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통행식’ 외교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조지 부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
- 즉 앞으로 테러리즘, 핵확산, 기후변화, 사이버안전, 에너지안보 등 미국에 직·간접적인 안보적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관계국은 물론 유엔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임.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의 서문에서 “금세기의 부담을 미국의 어깨로만 짊어질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각종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협력외교’, ‘동반외교’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대외적인 수단으로 동원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임.
-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NSS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행한 강연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과거에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고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하면서도 간접적으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우리는 탈바꿈해 갈 것”이라며 “스마트파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런 기조는 ‘군사력 사용’과 관련한 원칙제시에도 반영돼 있음. 보고서는 이른바 ‘선제공격론’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유보나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군사력은 필요한 경우에 국제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사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음. 보고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토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기구와 공조해 나가면서 폭넓은 국제적 지지확보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음.
- 이는 부시 전임 행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은닉을 기정사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유럽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미국신안보센터의 존 내글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세기에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과 도전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미국은 동맹과 함께 위협에 대해 싸워나갈 때 비로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음.

- 북한의 핵문제는 이란과 더불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서에서 지적됐음. 북한과 이란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의무를 무시한다면, 미국은 이들 국가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추구하겠다는 경고도 담았음.
- 보고서는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적시하고,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인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민권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사이버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사용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피하면서도,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최전선으로 꼽고, 알카에다 섬멸을 위해 끊임없는 압박을 가해나가는 동시에 예멘, 소말리아, 마그레브 등지의 테러리스트 은신처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 본토에서 과격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생적 테러리즘’에도 경각심을 일깨웠음. 최근 뉴욕 타임스광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테러 기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아랍계 군의관에 의한 총격사건, 이슬람 과격테러리스트 집단에 가입한 미국인 여성 사건 등은 바로 미국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는 것임.
-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여전히 경제침체의 터널을 확실하게 지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영, 미국의 ‘경제적 체력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힘과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 안에서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경제를 신장시키고 채무를 줄이면서 우리의 자식들을 경제력 있게 키워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천안함 관련 전문가 파견결정 배경>(5/27)

- 러시아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할 전문가 그룹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크렘린은 26일 특별 성명을 통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전문가 그룹 파견을 허락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문가 그룹 파견은 크렘린이 성명에서 밝혔듯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음. 다만, 당일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러시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을 뿐임.

- 이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사전 브리핑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 측의 이해를 구하는데 공을 들인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발언인 셈. 물론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부터 과연 러시아가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100%를 신뢰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임. 그렇지만, 그동안 북한 문제에서 중요 고비 때마다 한국 편을 들었던 러시아가 이번 사태 책임자가 북한이라는 우리 측 조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외였음.
- 지난 21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함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24일엔 이윤호 주러 대사가 6자회담 러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키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을 만나 재차 협력을 당부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원한다면 때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줄 것이고 전문가를 보내줬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를 검토 중인 우리 정부로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리 측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 그룹을 보내도 좋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임. 이날 크렘린 성명은 전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임. 따라서 러시아가 전문가 그룹을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것은 그동안 신중 모드를 견지해 온 러시아가 앞으로는 천안함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분석임.
- 크렘린이 이날 성명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에 파견될 자국 전문가 그룹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 “누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됨.
- 다시 말해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다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이는 러시아 외무부 이고르 리아킨-프롤로프 부대변인이 이날 북한 소행이라는 100%의 증거를 얻기 전에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함.



- 한국에 파견될 러시아 전문가 그룹의 규모와 인적 구성, 파견 시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우리 측 외교 채널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한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러시아 측의 평가가 미뤄지는 데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주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그 결과 러시아가 전문가 그룹 파견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아시아 각국, 中 패권 우려해 親美 강화”(5/26)

-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아시아 각국이 미국에 접근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 우선 천안함 사건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6일 보도했음.
-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데만 한 달 가까이 끝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방중 직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한국 측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음.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중국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조사 결과와 북한의 입장을 잘 받았다”는 말만 내놓고 있음.
- 이에 대해 상하이 푸단(復旦)대의 선당리 교수는 “중국은 천안함 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 결과의 조작 가능성은 1%, 결과가 사실일 가능성은 99% 정도일 것이지만 전쟁과 평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100%의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중국 정부 반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등을 돌리기도 원치 않지만, 북한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켜 결국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는다는 것. “중국은 주한·주일 미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북한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북한에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 교수는 전망했음.
- 중국과 일본 관계도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주창하는 하토야마 정권의 성립으로 한때 가까워지는 듯했으나, 최근 중국 핵 감축을 둘러싼 양국 간 논란 등으로 심각히 악화되고 있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5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기간 “중국이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현상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오카다 외상의 발언에 대해 양 외교부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등 거친 설전을 벌였음. 또 최근 중국 해군 헬기가 일본 호위함 주변에서 근접비행을 하고, 중국 해양조사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조사선의 측량 활동을 막는 등 해상에서 벌어진 일련의 마찰로 인해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음.



-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WSJ는 보도했음. 이슬람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과거 자주 미국과 불편한 관계였으나, 나지브 라자크 현 총리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재건팀 파견을 검토하고 군사 용도로 전용 가능한 기술의 이란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을 마련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음. 이와 관련해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특히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영해권을 주장하면서 인접국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이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윌러드 사령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과 해상 활동범위 확장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은 인접국들에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의 전력 등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WSJ “中 거만함에 주변국들 美와 관계 증진”(5/26)

-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는 우려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과의 친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우선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가 천안함 사태로 인해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전했음.
- 46명의 인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근 한 달 동안 중국은 한국 정부에 위로의 표시도 보내지 않았으며, 특히 후진타오 주석이 그 와중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임. 후진타오-김정일 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지 불과 며칠 후에 이뤄졌으며, 중국 정부는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한마디 귀뜸도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이 한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 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중국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국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임.
- 이 신문은 지난주 미·일 양국이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를 기존안대로 오키나와현 안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것도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반중국 정서를 대표하는 예로 제시했음. 지난해 9월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2006년 자민당 정권과 미국 측의 합의를 부정하면서 기지를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수정해 기존안을 받아들인 것임.
-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해병대 등 주일미군의 역지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일은 지난달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조사선의 동중국해 인근



측량과정에서 중국 함정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는 등 최근 몇달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음.

- 한·일 외에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역시 중국이 자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반발해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와이의 싱크탱크인 태평양 포럼 CSIS를 이끌고 있는 랄프 코사 전 미 공군대령은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감사편지라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캐나다, 한국지지… 대북추가제재 단행(5/25)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24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한 대북 대응에 대해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퍼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방안을 포함한 조율된 국제사회의 대응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하퍼 총리는 이어 “캐나다 정부는 통상과 투자 및 다른 북한과의 양자 관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품을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한 ‘통제리스트 지역 (Area Control List)’에 추가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음.
- 하퍼 총리는 또 고위급 북한 당국자들의 캐나다 방문을 유보시켰음. 그는 “오늘 우리는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는 캐나다의 확고한 약속을 밝힌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천안함 사건 조사를 위한 3명의 전문가를 국제조사단의 일원으로 파견한 바 있음.



[참고 1]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 문답>(5/26)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천안함 침몰이라는 즉각적인 위기에 대해 아주 강하고 계산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결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북한은 진실한 비핵화 의지를 갖추고 6자회담에 돌아와 진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클린턴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 모두발언

▲ 유명환 외교장관 = 오늘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에 있어 초석이며,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최상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은 공고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천안함 사건 관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또한 6월 하순 한미정상회담과 7월 하순 개최 예정인 외교·국방장관 합동회의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 우선 천안함 사건과 관련, 클린턴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대해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침착하고 냉정하게 다루고 있는데 대해 평가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무력공격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은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를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돕는 길이 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사건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6월 하순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과 7월 말로 예정된 외교·국방장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이 전략동맹의 성공적 발전을 평가하고, 연합방위대를 중심으로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관계 전반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은 앞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한·미 전략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결속력을 확인해서 기쁘다. 두 나라의 운명은 수십 년간 함께 연결됐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함께 국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미국에 한국의 안보와 주권은 엄숙한 약속이다. 우리 양국 관계는 안보 보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한국은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들에 소중한 파트너다.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서울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올해 말 개최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2012년에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처음 만나 양국 관계를 진정한 세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공동미래비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내일의 기회를 위해 우리는 오늘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이 대통령께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매우 사려 깊은 담화를 발표하셨다. 우리는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에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46명의 천안함 희생자와 그 가족, 한국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매우 객관적이었다. 증거는 압도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는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다. 미국은 이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난 며칠 간 일본과 중국의 리더들과 좋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협의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조치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한 것으로 안다. 미국과 한국은 합동훈련 계획을 발표했으며 안보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미래공격에 대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다. 북한은 도발행위와 이웃나라에 대한 호전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빈곤 대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북한의 미래는 오늘날 북한 지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다.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5/26/0503000000AKR20100526170100043.HTML>



[참고 2]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 문답2>(5/26)

◇ 일문일답

- 오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가 어떻게 논의됐는가.

▲(유 장관) 한·미 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치의 불일치도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우선 양자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24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여러 가지 무역제재조치를 발표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내법 규정에 따라 미·북한 관계에서 양자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북한 반응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데 중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인가.

▲(유 장관) 어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나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한·중 양국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 유엔 안보리 문제는 미국은 물론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과 긴밀히 양자적 접촉을 통해 협조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아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 유엔 안보리 회부 시기는 언제쯤인가. 그리고 북한 핵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며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천안함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유 장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오랫동안 7년여에 걸쳐 6자회담을 통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북한은 불행하게 두 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진실한 비핵화 의지를 갖추고 6자회담에 돌아와 진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클린턴 장관)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언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지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번 방한에서 이 대통령과 유 장관께서 자신감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고 한국이 결정하는 과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은 확실하게 한국을 지지할 것이다.



- 천안함 사태와 관련 중국에 어떤 역할을 기대고 있나.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책은.

▲(클린턴 장관) 지난 이틀간 중국에서 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과 유 장관께 알려드렸다. 원자바오 총리가 금요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가장 고위급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중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한국과 미국의 우려 사항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우리는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국과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다. 나는 중국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군과 미국군은 추가적인 강화조치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색하고 있다.

-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비핵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장기적 비전이 있다면.

▲(클린턴 장관) 미국과 한국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실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물론 천안함 침몰이라는 즉각적인 위기에 대해 아주 강하고 계산된 대응책이 필요하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결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중국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클린턴 장관) 보고서는 400페이지 분량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였다.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측에 그 보고서를 검토하라고 촉구했고 추가적인 정보와 브리핑이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도 똑같은 제안을 중국 측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제안을 중국 측이 받아들이지기를 희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께서 밝힌 대응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제사회를 통합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긴장 고조를 예방하고 더 큰 갈등으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접근이다.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국 및 다른 파트너와 협력함에서 이 대통령의 아주 강하고 효과적이며 의연한 이 담화 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5개국의 독립적인 그룹에 조사를 맡겨 결과를 기다린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런 대처 방식에 감명 받았다.



▲(유 장관)우리가 천안함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 모두 24명의 외국인 전문가들이 같이 합동으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결론이다. 그리고 특히 중국, 러시아 등에 물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조사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또 상대방에서 원한다면 상대방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우리 측과 토론하고 자료를 제공할 것을 이미 제의한 바가 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5/26/0503000000AKR20100526181000043.HTML>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